

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3. 12. 21.(목) 10:00

# 5 분 자 유 발 언

(탄소중립, 북구의 미래입니다.)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조문경 의원)

## - 탄소중립, 북구의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조문경 의원입니다.

우리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농도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는 ‘신기후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 산불,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평균 기온 상승, 계절의 길이 변화 등  
체감할 만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들은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온실가스의 단계적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산림에 흡수시키거나,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 이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2023년 4월,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춰 1년 뒤인 2024년 4월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우리 구는 2025년 4월까지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어제(12월 20일) 최종보고회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나올 울산시의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관련 컨설팅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2024년 안에 끝낸다면, 최소 4개월 정도를 앞당겨  
탄소중립 사회로의 우리 구 청사진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 준 박천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우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겠지만,  
더 나은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임을 알기에  
저는 오늘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에 각별히 신경 써  
기후위기에 관한 경각심과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22만 북구민과 공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실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 거주 10세 이상 남녀 76.7%가  
‘탄소중립 교육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탄소중립 주민참여사업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무려 92%를 차지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주민 참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일전에 제가 참석했던 북구청 간부공무원 대상 기후위기 교육은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가 어우러져, 기후위기를 피부로 와닿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양질의 교육을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시행한다면, 향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모든 부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종 사업들이 본 취지에 어긋남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12개 부서가 40여 개 세부감축사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각종 교통시설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농수산과는 농축수산 분야의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은 경제일자리과가, 울산숲으로 대표되는 우리 구 기후위기대응 도시숲 사업은 공원녹지과가 각각 앞장서야 합니다.

이밖에 다양한 사업들이 기본계획이란 큰 틀 아래에서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구청 전 부서가 유기적 협력관계로 예산 확보 등의 문제에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탄소중립 도시 복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사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재생에너지 매니저’란 갈등 해결 전문가를 두고,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지역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긴 어렵더라도,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검토하여,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부담요소들을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탄소중립 역량이 도시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돌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만드는 것이  
21세기 도시의 경쟁력이란 의미입니다.  
우리 구 또한 역량을 발휘하여  
잠재된 도시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